

민주 “후쿠시마, 정부·여당이 안가니 야당이 가겠다”

민주 대응단 내일 일본행...국힘 “일본 보도를 기정사실화해 공격” 윤영덕 “한일회담서 ‘돌덩이 치웠다’는 한 총리, 일본 총리인가”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두고 4일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집권 시절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길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니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관해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한 적 없는데 일본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나온 걸 갖고 저렇게 자꾸 한다”며 “오히려 일본 의도에 끌려가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일한의원연맹 측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후쿠시마에 오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교 소식통발 언론 보도와 관련,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고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수차례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

내에 들어올 일 없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일본 언론보도를 기정사실화해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후폭풍이 클 것이라 보고, 이를 고리로 대일 외교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위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하한다”며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가짜뉴스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사실상 묵인·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 등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하지만,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제3차 변제’를 골자한 정부의 경제

정책 해법과 관련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비난을 이어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돌덩이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다”며 “한 총리가 경제동원 제3차 변제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으면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일본 측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한-일 관계의) 장애물을 치워야 우리가 왜 장애물을 치우냐”며 “제3차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생존 피해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화방을 놓고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 총리가 하는 말처럼 들린다”고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물덩이냐”며 “그렇게 할부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수준이 격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4. 2023. 04.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

민주 “정부, 농민 절규 외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 해결’ 법 개정 토론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촉구하는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서 정당한 현수막이 난립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함께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이 점점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가 상대를 겨냥해 비방 일색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5·18 조사위 권고사항 조치, 국회 보고 의무화

송갑석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활동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정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

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정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대상자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수불가결 사항”이라면서 “국가가 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사개특위 ‘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

야당만 참석... “법무장관 시행령 유효 주장, 현재 결정 불복”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아 이날 회의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현재 결정을 법무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결정 이후에도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됐다”며 “그런데도 계속 수사권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도 “(법무부는) ‘검수완복’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현재 결정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생각이 없다”며 “동네 강패도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패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송기환 의원은 “야당과 정부는 일할 생각과 의지가 정말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현대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수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 | | | |
|------------|--|-------------------------|--|
| 두릅 | | 민두릅 참두릅 |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
| 포도 | | 루비로망 |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
| 감 | |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
| 임나무 | |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고, 효능이 같습니다. |
| 호두 | | 신품종 호두 |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 잘 부서집니다. |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누는 "갯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목록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갯을농원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8-91 (매곡주·정종화)

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 제충공고)

유한회사 신한이앤지 '갯'과 유한회사 뉴케이에스 '을'은 2023년 4월 4일 개최한 각각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갯'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갯" 유한회사 신한이앤지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97번길 66 대표이사 신안나

"을" 유한회사 뉴케이에스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105 대표이사 김시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